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요 약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 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IT발전은 정보화, IT산업 육성, 규제정책이라는 3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은 IT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의 투자유인 및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非IT부문의 IT활용도를 제고하여 왔고, 경쟁도입 및 공정경쟁 환경구축을 위한 규제정책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유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더욱 고도화된 인프라에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또한 R&D 및 인력양성, IT 중소기업 지원 등 IT 산업정책은 IT인프라 고도화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연관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이, 정보화, IT산업 육성, 규제정책 등 3대 IT정책은 서로간의 보완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이끌어 온 것이다. 2008년은 지금까지의 IT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가 새로운 IT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시점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향후 5년간 IT 발전전략의 화두는 IT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제 분야를 선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u-Society의 구축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첨단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IT를 통하여 가능한 사회가 곧 u-Society인 바, 이러한 u-Society의 구현은 앞서 지적한 3대 정책영역을 IT분야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보완·확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2절에서 IT분

야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3월부터는 u-Society 구현을 위한 세부 분야별 IT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IT부문 주요 성과 지표

주요 지표	'85~'97	~'02 *데이터는 '02. 기준	~'07 *데이터는 '06. 기준
정보서비스	국가전산망 보급 주요 정보 DB화 *주민, 부동산, 자동차	특히, 국제 정보화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G4C, G2B 물류·항만정보화 ASP서비스
정보활용도	인터넷 이용률 22.4%('99)	인터넷 이용률 59.4%	인터넷 이용률 74.8%
네트워크 종류	PCS CATV·DTV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3G, BcN, WiBro DMB
통신속도	256Kbps (전화·모뎀)	1~2Mbps (초고속인터넷)	70Mbps (BcN)
요금수준 * '05.물가지수 100 기준	121.6('97)	109.1	98.7
가입자 수	초고속27만가구('99.) 이동전화 683만명('99)	초고속1,041만가구 이동전화 3,234만명	초고속1,404만가구 이동전화 4,020만명
IT산업생산액	75.5조원('97)	189.1조원	248.1조원
국민경제기여도	GDP 비중 4.7% 수출비중 28.3% IT고용 104만명	GDP 비중 12.3% 수출비중 36.4% IT고용 137만명	GDP 비중 16.2% 수출비중 34.8% IT고용 144만명

출처 : 정보통신부 (2007. 11)

려하여도 기여율이 18.6%에 달하였고 중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80%가 IT산업 중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인하였다¹⁾.

IT산업이 잠재성장을 저하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IT 산업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IT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IT분야의 기술혁신이 전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첨단 IT산업의 구축이 타산업의 IT활용도 제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u-Society의 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부 IT산업정책으로 R&D 및 인력양성, IT중소기업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95~'03년 국내 경제성장요인 분석

(단위 : %)

경제성장률	중요소생산성	노동	비IT자본	IT자본	IT자본 성장기여율
4.31	1.04 *약 80%가 IT산업에 기인	0.32	2.16	0.80	18.6

출처 : KISDI 내부자료

II. IT분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전략과제

IT분야의 환경변화를 살펴볼 때 첫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IT 산업정책에의 요구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인구증가를 둔화와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 들어 요소투입의 기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및 연간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이러한 성장둔화요인을 생산성 증대로 얼마나 보완하는냐에 의해 좌우될 것인데, 생산성의 증대에 IT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발전과 IT활용의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은 IT자본 성장기여도 및 IT산업의 중요소생산성 기여도를 살펴볼 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의 경우 '95~'0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4.31% 중 IT자본은 약 0.89%를 기여하여 IT자본만을 고

두번째 IT분야의 환경변화로는 기존 시장의 성숙과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지난 10년간 IT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던 시장이 포화점에 접근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컨버전스의 과정에서 신규시장간, 신규 및 기존 시장간 경쟁·보완관계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투자 유인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단순히 분리되어 있던 산업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을 넘어, 서로 다른 규제 철학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통신·방송의 융합 촉진 및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시행이 u-Society 건설을 위한 주요 아젠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환경변화는 IT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사회시스템과 제도, 가치관 등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IT는 현재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동인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공통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01_ 중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물리적 투입요소 이외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등 여타의 모든 요인에 의한 성장을 설명하는 개념. 경제성장률은 중요소생산성 및 노동, 비IT자본, IT자본 등 인적, 물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합친 것임.

적 과제 수행에 IT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첨단 IT 인프라 구축으로 u-Korea에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의 국민 참여·공유의 확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u-Society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IT정책 아젠다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u-Society의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둘째 컨버전스 추세에 부응하는 방·통융합의 촉진, 셋째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충, 넷째 융합 촉진을 위한 경쟁친화적 규제제도 정립, 다섯째 우리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IT정책 영역의 확대가 5가지 IT정책 아젠다로, 이하에서는 각 아젠다별 세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I. u-Society 구현을 위한 IT정책 아젠다

1.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u-Society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조기 구축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규모의 BcN 전달망 구축을 완료하고 전달망/가입자망을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BcN망 고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기반도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의 자율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IPTV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BcN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u-Society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BcN을 이용하여 센서, 미래인터넷 등 신기술 연구 및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연계한 장비·서비스 검증을 지원하는 등 미래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도시관리 효율성이 최적화된 첨단 u-City 건설 지원, 모든 사물에 지능칩을 부착하여 다양한 u-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USN 구축기반 조성 등 사회인프라의 지능화·첨단화를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u-

Society에의 기반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향후 더욱 다양화·고도화·지능화될 전망으로, 인터넷 침해사고 대상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개인정보 이용 증가로 프라이버스 침해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범위는 개인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 영역으로 파급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BcN구축과 더불어 네트워크·서비스의 융복합화, 정보유통량의 증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u-인프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에서 끊임없이 모바일 보안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적용, RFID 등 신규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마련, 멀티미디어 중독 예방사업 추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등 사전예방 중심의 다양하고 적극적 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u-Society 기간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Society 환경과 패러다임에 맞는 정보화추진체계의 기능 재정립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개편·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총괄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IT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CITO 역할을 통해 미래 비전 제시 및 u-Society 건설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대비한 방·통 융합의 촉진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단말기 산업의 가치사슬과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21세기 신산업의 핵심이자 u-Society 사회 진입을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의 컨버전스는 이미 시장의 힘을 통하여 일정 수준 가시화 되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각 부분간의 규제철폐 및 법체계의 상이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진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해외 각국은 통신법으로의 단일화를 위한 제·개정 또는 분산된 각종 관련법령을 종합·체계화하여 신규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표 3〉 방·통 융합 대비한 주요국 법률 개정 사례

국가	법률 명칭	제·개정의 특징
미국	통신법	통신법에 방송법을 첨부
일본	전기통신사업이용방송법	제3의 법 제정
영국	통신법	통신법을 흡수·확대한 전자통신법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미디어서비스협정	통신법, 방송법 이외에 제3의 법 제정
프랑스	전자커뮤니케이션법	통신법을 흡수·확대한 전자통신법

출처 : IPTV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KISDI 이슈리포트 (2007.1)

이에, 우리나라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익성 및 매체선택권 보장의 가치를 유지하되 다매체, 디지털화, 융합화 되는 추세에 적합하도록 융합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과 통신부문 규제기구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분리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규제제도를 정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과 같이 방·통 융합과 직접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방·통 융합 규제기구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융합시대에 적합하게 방송통신의 경제적·산업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관련기구를 통합하되, 정책과 규제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정책결정과 일관성 있는 산업진흥의 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제기능의 집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가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바람직하다. 첫째, IP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편성·광고 등에 대한 규제는 현행 방송법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입규제는 기존 방송법 수준보다는 완화하여 경쟁을 통해 신규 서비스가 초기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부차적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기존 방송규제를 적절하게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만이 우월적인 제공능력을 가진 점이 우려된다면 이는 적절한 망 개방 정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투자유인도 제공하면서 이를 활용한 사업자간의 경쟁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3.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충

IT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산업으로서 경제성장, 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물가하락 등 거시경제 성장과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u-Socie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T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표 4〉 거시경제와 IT산업

경제성장	· '02년-'06년 IT산업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14.6% 성장 · '02년-'06년 연평균 GDP성장률 4.3% 중 1.9%p 기여 · ('06년)실질 GDP내 IT산업 부가가치 비중 16.2%
고용창출	· '02년-'05년 IT산업 고용 3.2% 증가(순산업 1.2%) · '02년-'05년 순산업 고용증가(약 54만명) 중 16.4%를 기여
수출 및 무역수지	· ('06년)전체 수출내 IT수출 비중 34.8% · '02년-'06년 IT부문 무역수지 누적 1,960억불 흑자(비IT부문 1,020억불 적자)
물가하락	· '02년-'06년 IT 소비자 물가 증가율 -4.67%(전체 3.03%) · '02년-'06년 IT 생산자 물가 증가율 -4.73%(전체 2.49%)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IITA

IT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IT R&D 수준이 감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환경분야 R&D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민간의 R&D 역량이 성숙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IT가 기술혁신의 중심이라는 점과 IT R&D의 외부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IT R&D 비중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IT산업의 국제화 추세를 감안하여 글로벌화에 대응한 어학 및 국제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IT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점차 심화되는 국제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IT의 다양한 분야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과실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IT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활용 교육 강화, 직장내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근로자 주도적 IT학습에 대한 유인 제공 및 여성, 고령자, 군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IT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IT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 융복합화 진전에 대비하고 u-

Society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형 디지털 벤처 생태계 구축을 통해 R&D 협업, 비즈니스 모델 공유, 인력교류, 시장거래 등 협력과 혁신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간 협업 중대를 추구해야 한다.

한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컨텐츠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중심 지식집약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컨텐츠, 기기,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미래 시장확대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IT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제고되고 u-Society 시대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융합 촉진을 위한 경쟁친화적 규제제도 정비

컨버전스 시대 정보통신 서비스부문의 활성화는 기술/시장의 발전 추세가 반영되고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제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경쟁 친화적이고 규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를 통하여 민간 투자, 기술개발 및 IT활용도의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정보통신 서비스부문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융합 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역무의 벽을 넘어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 M&A 등 진입단계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결합판매, 재판매 등 사업자간 다양한 경쟁 수단의 활용을 촉진하고 소매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⁹². 셋째 적기에 전파자원을 효율적 이용자에 공급하여 신규 서비스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활용도가 낮은 주파수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융합시대의 증대하는 전파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융합환경에서 규제왜곡을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 각 계층별로 동일 계층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비차별적인 경쟁환경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통신 및 방송의 전송 서비스 규제를 통합하여 진입규제완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궁극적으로 u-Society의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우리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IT 정책영역의 확대

이제 IT는 현재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동인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공통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IT의 잠재력을 전 영역에 확산시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 및 사회 제반 문제의 해결에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IT정책영역의 첫 번째 확대대상으로 먼저 非IT산업을 고려해 보자. IT는 제조 프로세스 혁신, 경쟁기업간 또는 원청·하청기업간 협업네트워크 구축, 신제품 공동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 국내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T는 유통, 관광,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IT정책의 수립·추진시에는 非I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IT 정책영역에 포함·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IT는 복지, 교육 및 공공부문 혁신에도 중요하다.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체계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보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택근무 일자리 창출, 실버친화적인 보건복지 정보서비스 제공 등으로 IT가 국민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평생학습기관 및 다양한 교육생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평생학습정보 통합 관리, 교육장소의 지능화, 가상실습 공간의 제공 등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에도 IT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통신과 방송을 이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저가에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도 가능하다. 정책결정 합리성 제고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지식정부를 구현하고, 온라인 공문장 활성화 및 맞춤형 정책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IT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상 IT의 정책영역 확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공공부문의 선진화가 달성될 때 u-Society의 실현도 가능할 것이다.

92. 결합판매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규제정책 변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통신정책연구(KISDI, 2006. 12)를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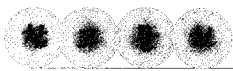
IV. 결 론

본 글에서는 그동안의 IT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u-Society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장기 IT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u-Society 실현은 단순히 기존의 좁은 의미의 정보화 전략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고 IT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사회가 바로 u-Society이기 때문에, IT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바로 u-Society 구축을 위한 IT정책인 것이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u-Society는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과 방·통융합의 촉진, IT산업의 고도화, 경쟁친화적 규제제도,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IT정책 영역의 확대 등 5대 분야를 u-Society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IT산업 육성, 규제정책을 통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IT시장 및 기술을 감안할 때, 잠시라도 발전에의 고삐를 늦출 경우 현재의 지위를 언제라도 상실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하여 경쟁한다. u-Society의 구현 과정은 바로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한 경주이며, 우리가 IT발전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성배 (2005), 『국내 ICT기업의 혁신활동 결정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성배 외 (2006), 『2006년 IT 시장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형표 외 (2005),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

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박동욱 외 (2005),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동욱 외 (2007), 『통신서비스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 (2007),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국환 외 (2006), 『지식정보화 전면화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부 (2006),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II

최계영 외(2007), 『전파관리정책의 구조와 패러다임 변화』,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7), 『KDI 경제전망』

한국은행, 『조시통계월보』각월호

Baumal, William J. and Dorothy Robyn, (2006), *Toward an Evolutionary Regime for Spectrum Governance - Licensing or Unrestricted Entry?*,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FCC, 2002, "Spectrum Policy Task Force Report", ET Docket No. 02-135

Nuechterlein, J, Weiser, P. (2005), *Digital Crossroads : American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Age of Internet*, MIT Press

OECD, (2005),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Powell, M., (2002), *Broadband Migration III: New Directions in Wireless Policy 6*. FCC

약 력



석 호 익

1978년 영남대 경영학 학사

1981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2002년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경력: 행정고시(21회) /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심의관 ·

정보통신지원국 국장 · 서울제1청장 · 정보화기획실장 ·

기획관리실장 · 정책홍보관리실장(1급)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 위원 · 통일IT포럼 회장 · 서울시 산학연 정책위원회

위원 · 연세대 및 인하대 겸임교수